"영포라인 비서관이 靑 내부 비리 직보"

박지원 "KB금융 회장 선임 박영준·정인철 관련 얘기도 들었다"

민주당 '영포 게이트' 전방위 공세 나서

전병헌 "사조직 의한 국정농단·국기 문란"

민주당은 8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촉발된 '영포 게이트' 확산을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권 내 권력투쟁설과 관련, "선진국민연대의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후임으로 심어놓은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박 차장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내 여러 기구를 개편하는 안을 직보해 자리를 지키려고 하거나 영전하려는 사람 간에 완력이 심해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전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여권의 제보 내용'에 대해 "영포라인의 청와대 모 비서관은 청와대 내 행정관, 비서관, 수석들의 비리를 조사해 직보한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얼마 전 KB금융 회장 선임 과정에서도 박영준, 정인철 라인이 관련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소위 영포회 문제와 청와대 공직윤리지원실의 불법사찰은 과거 하나회와 사직동팀의 결합으로, 정권 핵심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 비서관이 공기업 CEO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모임은 단순히 공기업 CEO 의견을 청취한 것 이상으로 공기업 인사를 문제를 논의한 자리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메리어트호텔 모임에는 박 차장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선진국민연대 대변인 출신의 정 비서관, 유선기 전 선진국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이 모임의 성격은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가 결합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상당한 국정 전반은 물론이고 공기업 인사까지도 논의, 결정된 것은 한마디로 사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이자 권력 사유화, 권력형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소속의 백원우 의원은 국민은행 부행장 시절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게 회사 지분 양도 등의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남경우 KB금융아카데미 원장에 대해 "선진국민연대 회원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김씨 사건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9명이나 한 것에 대해 경찰청 항의방문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영포게이트진상조사특별위원회 신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항의 방문하려다 무산되자 조원동(오른쪽) 사무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공천권 차차기 지도부로 넘기자"

민주 김효석의원 당에 쓴소리

차기 당권도전 행보 본격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연이어 당에 쓴소리를 하며 차기 당권 도전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겨울공화국'을 끝내고 '뉴민주당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으로, 전당대회는 여기에 도움이 돼야지 세력 간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격화되고 있는 당내 계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으기 위해 2012년 총선 공천권을 차차기 지도부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누가 민주당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적합한가를 놓고 경쟁하는 경연장이 아니라 총선 공천권을 갖느냐, 못 갖느냐의 권력싸움으로 가고 있다"며 "공천권을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아닌 차차기 지도부로 넘기자"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차기 지도부의 임기는 2011년 연말까지로 하고 2012년 1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 총선과 대선을 책임지게 하자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되면 당권과 대권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대권 도전 가능성이 큰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의원은 이번 전대에 불출마할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8월말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도 '뉴민주당으로 가는 길'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열나서 못 참겠다. 창피하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계파의 이익,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고 주류와 비주류 간 권력 투쟁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달 25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8월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은 누가 '뉴민주당정부'로 당을 이끄는데 더 적합한가, 누가 민주당에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며 "세력 간의 경쟁이 되풀이돼서는 희망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KB한마음, 전 정권 비자금 조성"

〈김종익 대표 회사·현 NS한마음〉

조전혁 의원 의혹 제기

'영포 게이트' 파문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한나라당에서 '전 정권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옛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KB한마음 거래업체 한 곳이 'KB한마음이 협력·거래업체들과 매출액조정, 비용 부풀리기 수법으로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함께 증거자료를 저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KB한마음 거래업체에서 제보받은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통장내역 등을 공개하면서 "KB한마음의 요구로 거래업체가 매출액을 3천만원으로 부풀렸고, 거래업체 대표 A씨는 2008년 4월7일 1305만원을 김씨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KB한마음 직원 신모, 백모씨도 동석했다"며 "이 건 외에도 KB한마음이 다른 거래·협력업체를 통해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는 전 정권 실세들과 친하게 지냈고, 평소 이광재, 안희정씨 얘기도 자주 했다고 한다. 정치권 커넥션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며 "전 정권 실세에게 비자금을 조성해준 경위와 그 규모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김씨가 KB한마음 주식을 저가에 인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공직윤리관실 폐지를"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8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보고체계 개선 등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즉각 없애야 한다. 왜 이런 기구를 만드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운찬 총리의 거취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에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사람을 총리로 기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준비기구 조기 설치키로

룰·선거 일정 등 논의

민주당 주류가 비주류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당내 전당대회 준비기구를 조기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8일 "9일 당무위에서 전대 준비위 구성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방침"이라며 "전대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이 기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당초 이 전대 준비위 구성 문제를 당무위 회의 자료에 공식으로 올리지 않고 회의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었으나 일부에서 중요한 문제를 폐쇄적으로 다룰 수 없다며 반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대 준비위에는 계파 안배 등을 감안해 20명 가량의 당내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헌·당규 개정 등 '전대 룰', 정강정책, 선거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대 준비위원장으로는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비주류 측은 공정한 전대룰 마련 등을 위한 당내 '혁신기구'의 즉각적 구성을 요구했으나 주류 측은 "일단 7·28 재보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재보선 전 전대 준비기구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주류 측이 전대 준비기구의 조기 구성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비주류 측은 정세균 대표 항의면담, 긴급 의원총회 소집 추진 등의 계획을 일단 취소했다.

그러나 비주류 측과 중도파 등에서 집단지도체제와 전당원투표제 도입, 당권·대권 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주류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주류 측은 전대 준비기구를 조기에 만들어 놓되 본격적 논의는 재보선 이후에 하자는 입장인 반면 비주류 측은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